

목 차

I. 서 언	III. 환경문제에 대응할 과제와 방향
II.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환경문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노력	IV. 결 언

## I. 서 언

새 천년을 맞는 우리에게서 다음 천년을 사는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오염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에 적조현상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약 2,500년 전 Rome에는 Cloacae Maxima와 같은 최초의 계획된 하수관거 흔적이 있어 오염의 역사가 꽤 오래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일부로 존재해 왔던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이며 산업화와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환경의 파괴는 가속화되어 와 우리 다음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 천년의 화두가 되고 있고 결국 지구가 지태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내에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용량

을 나타내는 지표로 Net Primary Production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Net Primary Production은 식물에 의해 고정되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감한 양이며 이것이 지구상 모든 동물의 식량이 된다. Peter Vitousek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40%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거나 파괴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80%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의 파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간만 해도 미국 동부지역 면적에 해당하는 2억ha의 산림지대가 사라졌고 중국의 총 경작 면적에 해당하는 1억 2천만ha의 사막이 증가했으며 인도의 총 cropland에 해당하는 4천 8백억 톤의 topsoil이 상실되었다. 이같은 현실에 '90년 지구의 날 의장이었던 Denis Hayes는 최근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ow could we have fought so hard, and won so many battles, only to find ourselves now on the verge of losing the war?”

그동안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이 계속되지만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고 있고 지구 평균온도도 계속 상승하여 작년에는 14.57℃를 기록하여 지구 평균온도가 기록되기 시작한 1866년 이후 최고에 달했으며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중이다. 또한 70년부터 95년까지 지구생태계의 25%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어 이는 6천 5백만년 전 공룡이 멸망한 이래 최대 규모의 생태계 파괴로 보고 있다.

UN에서는 '80년대를 'International Drinkingwater and Sanitation

Decade'로 정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에 노력했으나 아직도 하루 평균 2만 5천명이 불결한 물 때문에 사망하고 있고 적절한 상하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의 전세계 인구에 대한 비율은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자료들은 일단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절제한 개발이 환경재앙을 초래한 예로 중앙아시아의 Aral Sea 문제를 드는데 Aral Sea는 금세기 최대의 환경재앙으로 일컬어지며 물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1960도에 비해 1/3에 지나지 않는 염해로 변화였고 머지않아 지도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무절제한 소비 증가는 Throwaway Society 형성하였다. '90년대 초 미국에서만도 1년에 6000천대의 DC-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알루미늄캔이 소비될 정도로 소비가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막대한 인구의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소비가 무절제한 상태로 증가될 경우 그 결과는 가공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천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서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경제의 탄력성 제고에 의한 경제적 번영과 계층간 갈등이나 지역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적 형평을 유지하는 과제들을 들고 있으나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종족번식이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산아제한에 동참했듯이 환경보전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환경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된다.

## II.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환경문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노력

도시화·산업화 등 경제활동의 증가와 인구증가 및 무절제한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는 지구온난화, 수자원의 고갈과 적조 발생, 열대삼림의 파괴, 사막화의 가속화와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생태계 차원의 총체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구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유한한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지구환경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에 관련된 남북문제로의 특성이 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그 예로서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미묘한 대립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일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 CFC에 의한 오존층 파괴의 파급 효과, 산성비와 같은 월경성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와 하천 및 해양오염의 피해 확산과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등이 국제적인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간개념을 초월한 지속적인 문제인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현재의 오염행위에 대한 댓가를 후손이 치르게 되는 특징도 갖는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지표면의 온도가 0.4~0.5℃ 정도 증가하고 해수면은 15~20cm 상승했다고 보고 있는데 IPCC는 향후 100년간 지표면 온도가 1~3.5℃ 상승하여 해수면이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본질을 고려하여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서는 한 지역이나 나라의 노력과 함께 관련되는 여러 지역이나 나라의 지속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에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오염원인자와 피해자와의 괴리를 해결하면서 환경개선에 의한 수혜자가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한다. 앞으로 환경보전의 가치평가 등에 대한 국가간·세대간의 이해관계와 대립을 해결하고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각 나라들의 공동대처가 결실을 맺어야만 지구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은 국제 환경협약들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1987년의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전망」의 채택을 결의하였고 1992년 리우선언문에서ESSD의 개념이 제시되는 등 200개에 달하는 국제 환경협약들이 발효 중에 있다.UNEP, UNDP, OECD등 국제기구들의 빈번한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이들 국제 환경협약들은 ESSD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해 왔으나 협약들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서는 여전히 국가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1992년의 기후변화 협약의 실천을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과 이행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공동이행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와 청정개발 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을 해 오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축적시켜 온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개도국의 지속성장 필요성이 상충되어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보다 생물다양성 문제를 더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확인된 종의 수는 약 180만종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종이 많아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의 수는 실제로 이보다 몇 배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 내에 지구전체 생물종의

1/4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의 보호를 위해 1992년 UNEP의 생물다양성 협약이 채택되었고 1999년에는 '생명공학 안전성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생물공학 기술관련 지적소유권과 생물자원의 소유권 보호에 관한 세부규칙을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해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적정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1989년에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환경과 경제의 통합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청정생산 체제의 확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패턴의 정착,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체제의 구축과 함께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청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이같은 각 국가 대응노력의 특징을 보면 주요 우선 선진국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해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경친화적인 조세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과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를 강화하려 하는데 확보된 환경기술과 관련 산업부분의 높은 경쟁력으로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녹색소비주의' 환경마크제도의 활성화와 환경표준의 국제화로 수입물품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과도 연계되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Ⅲ. 환경문제에 대응할 과제와 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환경과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경제 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환경자원은 더 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환경자원의 적절한 평가를 전제로 하는 조세체계의 확립되는 등 경제질서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제 성장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왔던 환경보전의 우선순위가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과 소비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에너지 등 각종 자원이용에 있어 수요관리정책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LCA에 입각한 환경관리, 환경친화적 경영활동 유도,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자원의 무절제한 사용에 따라 형성된 Throwaway Society에서 Recycling Society로 소비체제의 변화시킴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미 23세기 전에 '인간의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라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구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는 소비자 문화 사회(Consumer culture)에서 받는 대중사회의 일원으로 느끼는 압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밖에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및 언론매체, 그리고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 상대적인 충족을 느끼는 잘못된 구매문화와 대형매장의 확대 등 수요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도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소비형태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More is Better (MIB)의 풍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소비 증가와 생활의 만족율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1인당 소비지출은 지난 반세기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만족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 있어 소비증가와 만족율에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소비자문화사회 (Consumer culture)로부터의 탈피와 언론매체의 변화를 통해 '순환형 사회'의 정착과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요 관리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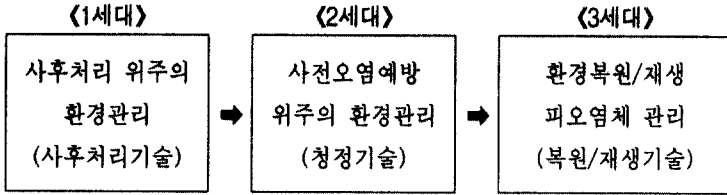
• 환경기술의 개발 및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실시와 환경산업의 육성 촉진

WTO 체제하에서는 기술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국내·외환경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기술의 개발에 의해 기술능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술 수요의 창출과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은 환경분야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전체적인 기술수준과 연계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관리 패러다임이 아래 그림과 같이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을 거쳐 환경복원/재생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수요가 발생될 것이고 이에 대비하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기술은 환경과 경제 두가지 가치를 연계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 환경산업의 활성화는 경제적 고 부가가치의 선진화 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게 되어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개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의 집행을 위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환경기술정보센터'를 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체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주관 국가지원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환경기술개발 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도록 하고 '99년도 연간 250억원 규모인 연구사업예산을 2000년도에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구개발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관리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관을 중심으로 장단기 기술개발 수요를 전망하고 기술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개발된 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구되고 있는 방안들은 신기술 사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 신기술 적용결과 실패한 공무원의 보호방안, 기술경쟁 턴키 입찰제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신

기술의 성능을 정부에서 평가하고 공증해줄 수 있도록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고 평가가 완료된 기술은 입찰시 실적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 이밖에 실적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사업에 성공불제를 시행하여 실적을 인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 자율적인 환경 관리의 확대

그 동안의 규제와 단속에 의한 환경관리는 더 이상 효율적인 관리 정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의 환경관리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부와 기업간의 상호협약에 기반한 자율적 환경관리로 전환되어야 하며 경제적 유인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은 환경이 국제적인 규제수단으로 되는 시대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정부에서도 환경관리 정책의 전환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환경보호에서 환경창조로 전환

국토환경상태를 정밀하게 재평가하여 이 결과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그린벨트, 국립공원구역 등 각종 보호구역의 조정을 위해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환경보전형 농업, 환경친화적 공단조성 등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개발 추진함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에 의하면 런던시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런던 면적의 58배 필요하며 전세계 인구가 런던과 같이 생활하면 3개의 지구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자원의 적절한 수요관리에 의해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어야 자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을 생활화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발사업의 사전오염예방의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계획단계에서 시행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정책이 되도록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자연공간 관리는 이용객 편의중심에서 자연환경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공원에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등 자연을 보호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직강화된 하천의 사행성을 회복시키는 등 잘못 정비된 자연공간의 복원을 위해서도 기술개발과 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연형 하천정비 등 자연상태를 보전하는 하천 관리에 의해 친수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과 사람의 관계를 治水에서 利水를 거쳐 保水의 관계로 정립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이용을 전제로 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해 왔던 삼림을 자연보호와 종 다양성의 보고라는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이라고 하겠다. 이밖에 우수한 자연생태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NGO, 전문가집단 그리고 시민운동가들

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인도에서 주정부 산림국과 지역조합의 공동관리에 의해 수십만ha의 산림을 회복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해결은 하나의 Sector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는 환경관리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추세이고 또한 이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Voluntary monitoring제도와 일본의 '내 마을 내 하천' 운동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순환형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물절약을 위한 Waterwise program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Wastewise program과 같은 전국적인 절약 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A2Z of H2O' program은 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대상의 제도로서 과잉소비가 습관화되기 전에 물 절약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초과하는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 에너지 절약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말이 아니다. 그동안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발하여 공급해 온 관습에서 벗어나 필요해도 절제하는 수요관리가 우선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연환경에 문제를 야기하는 물질은 자연상태에 존재해 온 biogenic물질은 아니며 인간들이 제조한(man-made) Xenobiotics물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내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언권의 강화를 기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문가들의 역할은 문제제기 차원이 아닌 정책 방향과 대안의 제시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관련법규의 합리적인 정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관련 법은 지난 '65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지만 이 법은 사문화 되다시피 하다가 '71년에야 법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다양하고 광역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령은 '77년의 환경보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여러차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거쳐 현재는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환경법만도 3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환경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환경관련 부처만도 15개 이상에 달하므로 타 부처에서 관장하는 환경관련법이 50개 이상이 되고 있어 각 부처 권한 사항의 경계지대에서 규제 관리의 사가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부처간의 정책방향의 차이로 상호 모순이 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여 환경관련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법, 농림수산업 관련법, 산업입지 및 산업육성 관련법 등 환경과 관련이 많은 법규들은 ESSD를 추구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에 적합하면서 사전예방적인 조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과 책임, 환경정의, 분권화, 산업별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비전을 담아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새 천년의 환경

정책의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법규는 전국을 너무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시행령-규칙-예규 등으로 이어지는 환경규제체계에서 하위단계로 갈수록 보다 상세하게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선택가능성을 높여야 합리적인 환경규제가 가능하고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발효중인 환경법규들이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따르기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유사한 법규를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보건안전, 환경책임보상 등에 관련된 법규 등 새로운 환경수요가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법규는 적절히 강화되거나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현재 환경관련법이 지나치게 자주 개편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환경수요의 폭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잦은 법규의 제·개정으로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 언

새 천년 (또는 21세기)은 환경문제가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시대로서 과학기술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술의 발전도 환경문제의 해결이 선도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능력은 기술력의 확보에 중요하고 결국 기술경쟁사회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구용량이 지탱하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근본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많은 것을 베풀어

오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한 자연은 이제 더 이상 파괴하고 이용만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제는 사람들이 베풀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새 천년에도 자연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여 환경복원과 환경창조라는 새로운 환경관리 패러다임에 적합한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 체제가 정비되어야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